"헌법적 가치 · 국민연금법 도전 행위"

기금운용본부 "해외투자자들 전주 방문 부담" 답변서에… 김광수 의원, "엄정한 책임 물을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9일, 기금운용본부의 '해외 투자자 면담 횟수 감소 원인 분석'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현행법인 국민연금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16일 기금운용본부는 해외투자자 방문 현황 자료와 관련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투자자들은 전주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관련 투자 부서를 서울 사무소 근무로 변경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보임'과 같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권력의 쌈짓돈,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 국민적 비판을 받아 온 기금운용본부는 자중하고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꼼수 논란을 받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이 발생하자 이원희 직무대행에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진성 기자

박근혜 인권탄압 주장 반박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악한 구치소 생활을 하며 인권탄압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서울구치소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을 알기 쉽게 신문지 2장 반으로 만들어 직접 누워보고 있다.

"수자원공, 4대강 부채 핑계 땅 장사… 헐값 매각"

친수구역 개발 외 추가 개발 진행… 정동영 의원, "국민 땅 재벌기업 먹이감으로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 5조6,000억원을 핑계 삼아 본격적으로 땅장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는 약 5조5,000억원이며, 매년 2,500억원을 20여년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통해 조성된 토지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환계획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15년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1조원대 규모의 1단계 친수개발사업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핑계로 2단계로 2016년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등에 대한 추가 개발을 통해 2조원을 추가 상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3단계로 2017년 시화MTV, 나주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등의 개발·분양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채를 갚는다는 핑계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민토지(체비지 등)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의 평당 조성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4대강 토지 조성원가(877,466원/㎡)는 평당 289만원이고, 이를 조성원가인 289만원에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명지동 인근 아파트(30평 기준)의 평당 땅값이 약 1,500만원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재벌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 최소 평당 분양이익은 토지분양가(289만원)의 4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참여한 진짜 숨은 의도는 4대강 사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강 주변 개발사업을 통한 땅 장사가 주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주범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4대강 부채를 핑계로 조성된 국민소유의 땅을 대기업 등에 헐값 매각하여 또다시 재벌기업들의 돈벌이 먹이감으로 제공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4대강 사업의 제2탄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땅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이라도 각종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기업 등에게 조성원가 가격으로 헐값 매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LH 등에 정당한 가격에 매각하고 LH는 해당 토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MB→朴 정부로 확대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수사 의뢰된 것은 수사를 할 것이다"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자체조사결과 추명호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에 포착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를 하기는커녕 관련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에 나섰다.

또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친한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심사가 열리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이명박정부 당시 신승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검찰이 박근혜정부까지 수사대상을 넓히는 양상이다.

다만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 3부가 이미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운영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정원이 벌인 각종 불법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상은 2차장을 팀장으로하는 국정원 수사팀이 맡기로 했다.

또 검찰은 추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조사를 위한 사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저소득층 위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60% 줄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있는 가맹점 수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사업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다.

안 의원은 "사업이 시작된 이래 예산액은 점점 늘어나 3년 전 대비 약 260억원이 증가했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6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도입 당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후 꾸준히 늘리면서 2014년 732억이었던 예산액이 올해 99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매수도 2014년에는 67만2043건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145만801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매년 감소해 작년은 2만2715개로 3년전에 비해 40%수준에 그쳤다.

특히 가맹점 중 도서와 숙박, 교통, 여행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안 의원은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종 협회가 협력해 저소득층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